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7. 10.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 목 차 〉

I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레스타티티 구단주 킹파워 태국에서 3억2천만 파운드 규모 부패혐의로 기소](#) … 1
- [스페인 축구협회장 부자\(父子\) 부패 혐의로 구속](#) … 4
- [튀니지 총리 반부패 추진으로 국민 신뢰 회복 도모](#) … 7
-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부패 혐의로 구속](#) … 9
- [과테말라 대통령, UN 반부패 그룹 위원장 추방 시도](#) … 12
- [수년전 이미 리오 올림픽 부패 관련 내부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 13
- [브라질 신임 검찰총장 뇌물수수 관행 척결 노력 지속 천명](#) … 16
- [두테르테 대통령, 옴부즈만실 내부 ‘부패’ 관련 조사 기구 구성 위협](#) … 18

II 한국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한국 최고 군납업체 대표 부패 스캔들로 사임](#) … 20
- [삼성 후계자, 부패 혐의 유죄판결로 징역 5년형 선고](#) … 22
- [한국의 청탁금지법 대체적으로 성공적](#) … 26
-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한국의 부정청탁 문화 바뀌](#) … 28

III 국제회의 동향

- [부패사건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APEC 워크숍](#) … 31
- [제25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회의 및 워크숍](#) … 32
- [‘17년 제3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 33

IV 옴부즈만 소식

- [세르비아: 신임 옴부즈만 임명](#) … 35
-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인 처형 관련 권리 침해 증거 발견](#) … 36
- [중국: 홍콩 옴부즈만 공공임대주택 내 유희 공간 창고 이용 관련 조사](#) … 38
- [영국: 노인 환자 가족들 요양 및 치료 관련 문제 민원 제기 어려워](#) … 40
- [오스트리아: 크라우터 옴부즈만 한국 대표단 비엔나 방문 환영](#) … 42
- [파키스탄: 신임 연방 세금 문제 옴부즈만 취임](#) … 43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레스터시티 구단주 킹파워, 태국에서 3억2천7백만 파운드 규모 부패 혐의로 기소 (The Guardian, 2017.7.12)

- 레스터시티 FC의 구단주이자 2016년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던 기업이 태국 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수천만 파운드 규모의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다. 레스터 시티 구단주인 비차이 스리바다나프라바와 그의 아들 아이야왓 스리바다나프라바가 소유 및 경영하는 기업 킹파워는 방콕 수바르나부미 공항의 면세점 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도 태국 정부와 약속된 분담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
- 레스터시티 FC의 구단주인 킹파워 인터내셔널은 태국 정부에 수익의 1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6년 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부여받았으나 그 중 140억 바트 (3억2천7백만 파운드)의 지급을 불이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가디언지에서 사본을 입수한 해당 고발 건의 고소인은 태국 정부 반부패 소위원회 의 찬차이 이사라세나라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부위원장은 킹파워가 계약과 달리 면세점 사업 수익의 3%만을 태국 정부에 지급하기 위하여 공항 직원들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 킹파워는 2010년 레스터시티가 2부리그에 있을 당시 약 3천9백만 파운드에 구단을 인수하였고 이후 1억 파운드 이상의 차입을 통하여 선수 영입과 연봉에 투자하고 손실을 메운 뒤 2014년 구단이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하면서 부채를 청산했다.
- 태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찬차이 이사라세나라 부위원장은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형사 고소 건으로 접수하고 관련자들을 법에 입각하여 형사처벌 해 주기를 요청한다. 또한 지급 불이행된 140억 2900만 바트에 대하여 태국 국고 환수 판결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해당 금액이 그 누구의 개인적인 이득으로 취해져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태국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며 따라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 스리바다나프라바 일가에서 소유 및 경영하는 킹파워 그룹 산하 두 개의 다른 회사 역시 고위 경영진 한 명과 함께 부패 혐의로 고발되었다. 태국 공항 임원 14명도 부정행위와 신의성실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고발되었다.
- 1989년 방콕의 작은 상점에서 시작된 킹파워 그룹은 2006년에 수바르나부미 공항 면세품 판매 사업 독점권을 얻으면서 크게 성장했고 비차이 스리바다나프라바 회장은 세계 12위의 부자가 되었다. 당시 태국 수상이었던 탁신 시나와트라는 후에 군부 쿠데타에 의해 축출되었다. 후임 총리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맨체스터 시티 구단의 구단주였던 시나와트라에 매우 적대적인 세력으로, 현재까지 태국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킹 파워는 2006년 면세점 사업권 계약 체결 당시 수익의 15%를 태국 정부에 지급할 것에 동의했다. 찬차이 이세라세나락 부위원장은 태국의 프라우트 찬오차 현 수상을 포함한 3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50개의 증거 자료가 접수되었다.
- 이세라세나락 부위원장은 향후 2개월 내 킹파워에 대하여 네 건의 고발을 더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첫 번째 고발 건을 받아들일지 결정 여부는 7월 25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도되었다.
- 이세라세나락 부위원장은 ‘누군가를 고소하는 것은 재미있는 일은 아니다. 그쪽에서 우리를 맞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측 주장은 명확하며 따라서 맞고소에도 대비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개인 자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 방콕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레스터시티 부구단주이자 킹파워 그룹 최고 경영자인 아이야왓 스리바다나프라바는 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부여받은 이후 11년 간 회사가 어떠한 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가디언지가 레스터시티 구단을 통하여 사건의 세부 사항 확인과 혐의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구단에서는 아이야왓 스리바다나프라바 부구단주가 응답을 거부했다는 소식만 전했다.

- 방콕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공항공사의 니티나이 시리사마타칸 사장 역시 혐의를 부인했으며 킹파워 그룹에서 계약을 이행했고 공항에서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면적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태국 정부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 태국 정부가 승소하고 그에 따라 킹파워 그룹이 태국 정부에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레스터시티 구단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될지 아직 분명하지는 않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신의 불성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구단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구단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스리바나다프라바 부자를 비롯하여 레스터 시티 구단의 태국인 이사 중 그 누구도 개인 자격으로 고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 원문기사 : Leicester's owner, King Power, accused of £327m corruption in Thailand (The Guardian, Jul. 12, 2017)

스페인 축구협회장 부자(父子) 부패 혐의로 구속 (New York Daily News, 2017.7.18)

- 스페인 축구협회의 앙헬 마리아 비야르 위원장과 그 아들 외 두 명의 협회 임원이 반부패 수사 결과 화요일에 구속되었다.
- FIFA 부회장이자 유럽축구연맹(UEFA) 부회장이기도 한 비야르 협회장은 승부조작을 통한 사업 계약을 통해 아들에게 수익이 돌아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반부패 담당 주 검찰청 소속 검사가 밝혔다.
- 주 검찰청과 스페인 경찰청에 따르면 비야르 협회장과 그의 아들 고르카 비야르, 그리고 두 명의 축구협회 임원이 협회 본부 및 기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구속되었다.
- 마드리드 외곽 라스 로사스의 스페인 국가대표팀 훈련장 근처에 위치한 사무실은 직원들이 분주히 출입하는 가운데 두 명의 정복 경찰이 협회 사무실 정문에 배치되었다.
- 협회장 부자(父子)와 함께 체포된 두 명의 임원은 후안 파드론 부회장과 라몬 에르난데스 지역협회 서기장으로, 파드론 부회장은 축구협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테네리페 지역 협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 이들은 축구협회 재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혀진 부실 경영, 자금 유용, 부패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었다.
- FIFA는 성명서를 통하여 ‘비야르 요나 관련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스페인 축구협회 내부 사정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스페인 축구협회의 발표를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스페인 경찰청은 ‘공놀이’(soule)라는 별칭의 수사 일환으로 축구협회 본부와 테네리페 지역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체포된 인사들과 연관된 사업체와 거주지’ 등도 수색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 경찰청은 2016년 초 스페인 스포츠 당국인 스페인 스포츠 고위 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 수사 결과에 따라 주 검찰청에서는 앙헬 마리아 비야르 협회장이 ‘스페인 국가대표팀과 다른 국가대표팀 사이의 승부 조작을 통해 서비스 및 벤처 사업 계약을 따냄으로써 아들에게 수익이 돌아가도록’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 검찰청은 파드론 부회장과 테네리페 지역 협회 사무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계약을 유리하게’ 해 주었을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 이니고 멘데스 스페인 교육·문화·스포츠부 장관은 압수수색 이후 TV 출연에서 ‘스페인은 모든 이에게 똑같이 법이 집행되는 국가이며 법 위에 존재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 AP에서 스페인 축구협회 및 테네리페 지역 협회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 UEFA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여 ‘비야르 요나 협회장 관련 보도 내용을 살펴보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스포츠 고위 위원회는 이번 구속으로 인하여 ‘경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직 축구선수 출신으로 올해 67세인 비야르 협회장은 1988년부터 스페인 축구협회장직을 연임하면서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2010년 월드컵과 2008년, 2012년 유럽 챔피언십 승리를 이끌었다.
- 비야르는 또한 1990년대부터 FIFA와 UEFA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 축구계의 여러 유명인사와 긴밀히 협력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이후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된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 비야르 협회장의 아들 고르카 비야르는 최근 수년 간 남미축구연맹의 법무이사직을 맡았으며 미국 연방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세 명의 협회장 재임 기간 동안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거의 CEO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고르카 비야르는 2016년 7월 남미축구연맹 법무이사직을 사임했다.
- 앙헬 마리아 비야르는 애틀레틱 빌바오 팀과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한 미드필더로 은퇴 후 변호사와 축구 행정가로 일했다. 25년 전 UEFA 집행

-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년 전 FIFA 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양 협회의 법무위원회 및 심판위원회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유치 경쟁 당시 비야르 협회장은 스페인-포르투갈 공동개최 추진위원회를 이끌었는데 당시 경쟁국이었던 카타르를 지지하는 투표조작을 계획하고 남미 출신 위원들을 연루시킨 의혹에 대하여 2010년 FIFA 윤리위원회의 간략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8년 월드컵 개최권은 결국 러시아에 돌아갔다.
 - 비야르와 관련된 비리 의혹은 월드컵 개최지 선정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당시 FIFA 윤리위원회의 마이클 가르시아가 발행한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 2014년 작성되고 지난달 발간된 보고서에서 가르시아는 ‘비야르 협회장은 의혹에 대한 사실과 정황에 대하여 말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녹음 자료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듯이 비야르의 말투와 태도는 상당히 거슬렸다’라고 말하고 있다.
 - 최근 세력 분열을 조장하며 점점 더 큰 야망을 보이고 있는 비야르는 작년 UEFA 회장 선거에서 미첼 플라티니의 후임으로 출마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 고르카 비야르는 남미축구협회에 합류하기 전 마드리드 지역에서 유명한 스포츠 분야 변호사였다. 약물 검사 양성반응으로 2010년 투르드프랑스 우승을 박탈당한 사이클 선수 알베르토 콘타도르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 비야르 부자(父子)의 체포는 축구계의 재정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스페인 당국의 가장 최근 조치 중 하나이다.
 - 지난 해 바르셀로나의 포워드 리오넬 메시와 그 부친의 탈세 혐의가 유죄 확정되었고 지난 수 주 간 검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포워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전 코치 조세 무리뉴 등을 포함한 기타 축구계 인사에 대한 탈세 수사를 진행하였다. 호날두와 무리뉴 모두 탈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원문기사 : Spanish soccer federation president and son arrested on corruption charges (New York Daily News, Jul. 18, 2017)

튀니지 총리 반부패 추진으로 국민 신뢰 회복 도모 (Reuters, 2017.7.21)

- 튀니지 총리는 지난 목요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패에 대한 전쟁을 추진할 것이며 당파에 관계없이 그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세프 샤희드 총리는 반대를 무릅쓰고 긴축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와중에도 이와 같은 국회 연설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 부정부패는 2011년 제인 엘아비디네 벤 알리 전 대통령을 축출한 튀니지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튀니지 국민들은 자유선거 원칙과 민주주의 확립 이후 지난 6년 간 튀니지에서 뇌물 수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다.
- 지난 두 달 간 튀니지 정부는 부패 혐의로 구속된 재계 인사 15명의 재산을 압수하고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
- 그 이후 튀니지 정부는 또한 20명의 관세공무원을 해임하고 수십 명에 대한 부패 연루 혐의 수사를 의뢰했다.
- 뇌물수수 척결 캠페인에 대한 첫 연설에서 샤희드 총리는 ‘우리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7억 디나르(2억8천6백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와 10억 디나르 상당의 밀수품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 샤희드 총리는 또한 ‘우리의 슬로건은 그 어느 누구도 부패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자신의 정치권력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부패 범 죄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샤희드 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튀니지, 리비아 정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 재벌이자 유력 재계 인사 샤픽 자라야를 지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샤픽 자라야는 지난 2014년 선거 기간 동안 샤희드 총리가 이끈 여당 니다투니스의 선거자금 조달을 도운 바 있다.
- 자라야는 지난 5월 구속됐다. 자라야의 변호인은 자라야가 정치 보복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일각에서는 샤희드 총리의 반부패 캠페인을 정치적 쇼맨십에 불과하며 집권여당 니다투니스의 내분일 뿐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샤희드의 반부패 캠페인 연설 이후 야당 인민전선 소속 국회의원 암마르 암루시아는 ‘왜 자라야를 꼭 지금 구속했어야 하는가? 자라야는 여당의 선거자금 모금과 선거운동 등을 도와 온 인물이다. 이것은 부패와의 전쟁이 아니라 편협한 정치적 분란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 샤희드 총리는 반부패 캠페인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비난을 부인했다.
- 튀니지의 반부패위원회는 튀니지에서 뇌물수수 문제가 여전히 만연하며 이로 인하여 연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반부패위원회에서는 50명의 고위 중앙 공무원이 연루된 부패 의혹을 제기해왔다고 덧붙였다.

※ 원문기사 : Tunisian premier seeks to restore trust with anti-corruption push (Reuters, Jul. 21, 2017)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부패 혐의로 구속 (Reuters, 2017.8.4)

- 에티오피아 정부가 최근 뇌물수수 관행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2주간 수십 명이 구속되었고 그 중에 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재무장관도 포함되어 있다고 에티오피아 국영 텔레비전이 금요일 보도했다.
- 다수의 재계 인사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번 반부패 조사를 통하여 구속된 가장 고위 공직자는 알레마에후 구조 재무장관이다. 국영 에티오피아 방송공사(EBC)의 보도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도로공사의 자예드 월데가브리엘 국장 역시 금요일 구속됐다.
- EBC는 또한 뉴스 속보를 통하여 에티오피아 하원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구조 장관의 불기소 특권을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 EBC는 검찰총장실을 인용하여 ‘그 이후 즉각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장관이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 재정경제협력부와 수도 주택개발공사, 국영 에티오피아 제당공사, 도로공사 등의 공무원 40여명 역시 금요일 구속되었다.
-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는 횡령과 수십억 비르의 자금 유용 등이다.
-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 개발 및 확장 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 2016년 벌어진 소요사태에 대한 대응의 일부로 에티오피아 정부는 최근 강력한 반부패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반부패 시위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부패 정치과 인권유린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로 격화되었다.
- 시위가 격화되면서 외국인 소유의 사업체나 수출용 화훼농가 등이 습격을 당했다.
-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후 정부의 실정과 권력 남용 문제가 심각하며 정치적 참여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 지난 금요일, 에티오피아 정부는 소요사태 이후 선포되었던 10개월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했다.

※ 원문기사: Ethiopia arrests state minister for finance on suspicion of corruption (Reuters, Aug. 4, 2017)

과테말라 대통령, UN 반부패 그룹 위원장 추방 시도 (The Washington Post, 2017.8.27)

- 과테말라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이 일요일 아침 UN의 지원을 받는 반부패그룹 위원장의 추방을 명령했다. 최근 이 단체에서 시행한 철저한 조사로 인하여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모랄레스 대통령의 선거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옮겨가던 상황이었다.
- 그러나 모랄레스 대통령의 추방명령 몇 시간 후 과테말라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시적으로나마 추방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 콜롬비아 변호사이자 2013년부터 유엔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Against Impunity in Guatemala, CICIG)의 위원장직을 수행한 이반 벨라스케스에 대한 모랄레스 대통령의 추방 시도는 즉각적인 국제사회의 비난과 마주했다. 미국을 비롯하여 기타 여러 국가에서 위원회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위원회가 과테말라에서 ‘불법 면책 근절을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모랄레스 대통령의 그러한 결정이 ‘충격적’이라고 규탄했다.
- 워싱턴에 위치한 라틴아메리카 연구소의 중미지역 전문가인 아드리아나 벨트란은 “모랄레스 대통령은 과테말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는 과테말라 검찰청과의 협력 하에 부패에 주요한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했고 과테말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왔다”고 말했다.
- 과테말라 정부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된 동영상을 통하여 모랄레스 대통령은 자신이 ‘자유주의 독립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여 벨라스케스 위원장의 외교 기피 인물 지정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벨라스케스 위원장의 국외 추방을 거부한 카를로스 라울 모랄레스 외교부장관을 경질했다.

- 루크레시아 에르난데스 마크 보건부장관과 세 명의 차관이 일요일 사임을 발표했다. 에르난데스 마크 장관은 공개 서한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의 벨라스케스 위원장 추방 시도는 부패에 대한 면책을 옹호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일요일 보건부 장·차관의 사임 발표 이후 과테말라 대법원에서는 추방 명령에 대한 임시 집행중지 명령을 표결했다. 대법원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자세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는 지난 10년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혐의 조사의 원동력을 제공해 왔으며 2015년 전국적인 항의 시위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과테말라 검찰총장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조사관 및 집행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과테말라의 오토 페레스 몰리나 전 대통령과 록사나 발데티 부통령을 비롯하여 수십 명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했다. 몰리나 전 대통령과 발데티 전 부통령은 현재 수감 중이다.
-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는 부정부패에 대한 면책이 만연하고 살인사건이 거의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한 국가의 취약한 사법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설립되었다. 세계 각국 출신의 조사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정교한 수사 기술 및 도청, 금융거래 기록 조사 등을 통하여 과테말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부정부패 사건들을 추적해 왔다.
-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한편으로 과테말라 정부 내에 외국 단체의 주권 침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낳았다. 위원회의 권한은 2년을 주기로 갱신된다.
- 유명 개그맨 출신으로 2015년 과테말라 대통령에 당선된 모랄레스는 당시 과테말라를 휩쓸었던 반부패 정서에 힘입어 '부패 No, 도둑질 No' 라는 선거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올해 초 모랄레스 대통령의 형과 아들 중 한 명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다.
- 지난 금요일, 벨라스케스 위원장은 델마 알다나 검찰총장과 함께 모랄레스

대통령이 정당 대표직에 있을 당시 선거자금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하고 공식 수사를 촉구했다. 공식 수사를 위해서는 모랄레스 대통령의 대통령 면책 특권을 박탈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모든 혐의를 부인해 온 모랄레스 대통령은 같은 날 뉴욕의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을 방문하여 국제 반면책 위원회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추정된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일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벨라스케스 위원장의 과테말라 정부와의 협력에 대해 ‘수많은 사건이 정의에 입각하여 해결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 원문기사 : Guatemalan president attempts to kick out U.N. anti-corruption chief (The Washington Post, Aug. 27, 2017)

수년전 이미 리오 올림픽 부패 관련 내부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The Nes York Times, 2017.9.8)

- 브라질의 전 체육계 인사가 이번 주 부패 및 뇌물 혐의 수사의 일환으로 브라질 올림픽 조직위 최고위 임원 가택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수년 전 이미 2016년 리오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부패에 대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보고했었다고 밝혔다.
- 브라질 경찰은 유력 IOC 위원이자 남미 첫 올림픽 개최라는 업적을 성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브라질 올림픽 조직위원장 카를로스 누즈만의 자택에서 현금 15만5천 달러 상당을 발견했다. 브라질과 프랑스 검찰은 브라질이 IOC 위원을 매수하여 마드리드와 시카고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201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 현재 보스톤에 머물고 있는 전 브라질 체육계 인사 에릭 말레슨은 2013년 축출되기 전까지 10년 이상 브라질 빙상연맹을 설립하고 이끌어온 인물이다. 말레슨은 브라질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부패에 대하여 IOC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말레슨은 뉴욕타임즈에 자신이 보낸 이메일 일부를 공개했다.
- 누즈만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해왔던 말레슨은 리오올림픽 개최 관련 여러 의혹을 제기하였고 75세의 누즈만이 2016년 리오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직과 브라질 올림픽 위원회의 회장직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IOC의 결정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 2014년 9월 6일자로 IOC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IOC 사법위원회에 발송한 이메일에서 말레슨은 ‘이는 분명한 이해관계 충돌이며 IOC에서는 이러한 충돌을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됐다’고 말하고 있다. 말레슨은 또한 2012년에도 IOC에 누즈만의 부패와 선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누즈만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제기된 혐의는 없는 상태이며 그는 모든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브라질 사상 최초의 봅슬레이 국가 대표팀 파일럿으로 활약했던 말레슨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하여 브라질 및 프랑스 당국과 접촉했다고 말했다.

- 말레슨은 전화 인터뷰에서 ‘2011년부터 IOC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얘기하기 시작했다. 해마다 브라질 올림픽조직위와 브라질 올림픽위원회 관련 스캔들이 새롭게 터져나왔다’고 말했다.
- 검찰에서 리오올림픽 유치와 누즈만 조직위원장에 대하여 제기하는 혐의에는 2016년 올림픽 관련 뇌물수수 의혹도 연관되어 있다. 올림픽을 넘어서 브라질 사회 전체에 광범위하게 만연했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정재계 고위인사들이 수감되었고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리오올림픽 유치 성공 당시 리오데자네이로의 주지사였던 세르지오 카브랄은 올림픽 관련 건설사업을 포함하여 대규모 사업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 IOC는 성명서를 통하여 말레슨이 IOC에 연락하여 ‘분쟁 가능성 해결을 위하여 브라질 올림픽위원회와 직접 협력하도록’ 하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IOC가 누즈만 위원장이 이끄는 조직을 통하여 누즈만 위원장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 경찰에서는 이번 주 IOC 명예위원인 누즈만이 리오의 올림픽 유치 관련 심사위원 매수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누즈만이 마이애미에서 활동하는 부유한 브라질 사업가 아서 소아레스 및 세계육상연맹 책임자였던 라마인 디아크와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소아레스 소유의 회사 중 하나가 디아크의 아들 파파 마사타 디아크 소유의 회사를 통하여 디아크에게 2백만 달러를 지급했다. 라마인 디아크는 현금을 받은 대가로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을 무마해 준 혐의로 2015년 프랑스에서 체포된 바 있다. 프랑스 당국은 그의 아들 역시 프랑스에 입국하는 즉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다음달 페루 리마에서 총회를 여는 IOC의 대변인은 IOC가 ‘형사상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권한도 없기 때문에 위법 행위에 대한 의혹을 우리에게 제기하기보다는 해당 법 집행당국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 2016년 리오 하계 올림픽 개최 2년 전 브라질은 FIFA 월드컵도 개최하였고

이 두 대회 개최 관련 사업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다. 부패 조사관들은 12개의 월드컵 경기장 중 절반 이상의 건설 사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브라질 월드컵 개최 당시 브라질 축구협회장이었던 호세 마리아 마린은 자금 세탁 및 인터넷뱅킹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서게 됐다. 아직 브라질에 머물고 있는 마린의 전임자와 그 전임자 역시 세계 축구계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널리 드러낸 사건들과 관련된 혐의로 미국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말레슨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될 것이라고 말했다.
- 말레슨은 또한 정확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돕기 위해 내가 아는 모든 정보를 설명, 제공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고 이미 당국 쪽에서 확보해 놓은 정보도 많다'고 덧붙였다.

※ 원문기사 : Whistle-Blower Says He Told of Rio Olympics Corruption Years Ago
(The New York Times, Sept. 8, 2017)

브라질 신임 검찰총장 뇌물수수 관행 척결 노력 지속 천명 (Reuters, 2017.9.19)

- 브라질의 반부패 노력을 이어나갈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월요일 취임 하면서 전임 총장의 뒤를 이어 브라질의 뇌물수수 관행 척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케우 도지 검찰차장이 전임 호드리구 자노 총장의 뒤를 이어 신임 브라질 연방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자노 전임 검찰총장의 임기 동안 국영기업 계약 수주 대가로 건네진 수십억 달러의 정치 뇌물 등을 포함한 브라질 사상 최대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 브라질리아에 위치한 검찰총장실에서 열린 짧은 기자회견에서 도지 신임 검찰총장은 브라질 국민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는 부패 척결 노력의 지속이라고 언급했다.
- 도지 총장은 ‘브라질 국민은 더 나은 국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 나라의 운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은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부패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결과를 그저 기다리기보다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자노 전임 검찰총장의 4년 임기가 끝나면서 브라질 연방 검찰청 전체에 신임 총장에 대한 투표가 실시됐다.
- 도지는 투표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브라질 법에 따라 대통령이 최종 선정 권한이 있으며 미첼 테메르 대통령이 도지를 선택함으로써 지명 2주 후 7월에 상원에서 인준을 받았다.
- 국영석유기업 페트롤레오 브라질레이로를 둘러싼 브라질 사상 최악의 뇌물수수 스캔들을 밝혀냈던 연방 검찰청 핵심 팀에서 도지의 임명을 지지했다.
- 자노 전 검찰총장은 테메르 대통령에 대하여 세 개의 부패 혐의를 제기했다. 뇌물 수취 의혹과 관련된 첫 번째 혐의는 8월 초 브라질

하원에서 기각됐다. 브라질 법에 따라 대통령은 연방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표결을 했을 때에만 대법원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 지난주 자노 전 검찰총장은 테메르에 대한 공갈협박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두 건을 더 제시했다.
-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육가공회사 JBSSA 소유주들이 양형거래 조건으로 한 증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은 테메르 대통령이 정치적 편의를 봐주는 대가 및 자신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목격자의 침묵을 대가로 뇌물을 수뢰했다고 증언했다.
- 테메르 대통령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자노 전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도지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식에서 테메르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은 공무원이 아니라 법 안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 원문기사 : Brazil's new top prosecutor is sworn in, says will maintain graft fight (Reuters, Sept. 19, 2017)

두테르테 대통령, 옴부즈만실 내부 '부패 관련 조사 기구 구성 위협' (INQUIRER.NET, 2017.9.29)

- 두테르테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은행 계좌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옴부즈만실에 위협을 가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옴부즈만실이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옴부즈만실 내부 부패 의혹에 대한 조사 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목요일 필리핀 국영 방송 PTV 4에서 방송된 에르윈 툄포와의 인터뷰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옴부즈만실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은행 거래 조사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콘치타 카르피오 모랄레스 필리핀 옴부즈만은 자신에 대한 조사는 제한했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의 사위인 마나세스 카르피오가 자신의 조카이기 때문이다.
- 옴부즈만실의 조사는 대통령과 그 일가가 여러 은행 계좌에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숨겨두었다는 안토니오 트리아네스 4세 상원의원의 의혹 제기에도 근거하여 시작되었다.
-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 이후로 옴부즈만실에서 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멈춘 적이 없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니 내가 조사를 받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했다.
- 두테르테는 그러나 옴부즈만실 역시 부패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 두테르테 대통령은 '거기서 사건 있었다고 하는 군인들한테 가서 돈 얼마나 냈는지 물어보세요. 경찰, 기타 다른 사람들, 시장, 주지사, 다 가서 물어보세요. 돈 냈죠. 돈 주고 나서 사건 취하됐죠'라고 말했다.
- 여전히 옴부즈만실 내 부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옴부즈만실을 조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은 또한 '옴부즈만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안 하겠다면 조사권한을 가진 대통령인 내가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주겠다.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다. 누가 헛소리를 조사하고 싶어하겠는가?'라고 말했다.

- 두테르테 대통령은 만약 옴부즈만실 자체가 부패한 것으로 밝혀지면 국민은 어떻게 할건지 질문을 던졌다.
- 두테르테는 '내가 직접 손댈 수는 없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옴부즈만실과 제도 자체, 관련된 모든 것들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옴부즈만실은 대통령과 그 일가의 은행 거래 기록을 보았을 때 수년 간 두테르테 대통령 및 가족의 은행 계좌로 흘러 들어간 비자금의 10억 페소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두테르테 대통령의 법률고문인 살바도르 파넬로는 옴부즈만실에 제출된 대통령의 은행 거래 기록이 반드시 그가 10억 페소 이상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 파넬로는 또한 문제의 은행 거래 기록 중 어떤 것도 해당 자금이 부정하게 취득되었다는 사실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원문기사 : Duterte threatens to form body to probe 'corruption' in Ombudsman (INQUIRER.NET, Sept. 26, 2017)

2 한국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한국 최고 군납업체 대표 부패 스캔들로 사임 (NIKKEI ASIAN REVIEW, 2017.7.20)

- 군용기 개발 사업 관련 수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로 국영 군납 회사의 비리 스캔들이 터진 가운데, 지난 목요일 문제의 회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성용 사장이 사임했다.
- 이번 주 초 하 사장의 자동차 및 회사 본부에 대한 감찰의 압수수색 이후 하 사장은 모든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검찰조사에서 자세히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KAI의 장성섭 부사장이 이사회 의 선임 사장 선임 투표가 있을 때까지 사장 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 하 사장은 성명서를 통하여 ‘나와 회사에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하며 한국 항공 우주 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진 KAI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계약 수주를 대가로 수백억 원의 뇌물을 정치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천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비자금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 중 하 사장의 사임이 이루어졌다. 검찰에서는 기동헬기 수리온과 T-50 훈련기, FA-50 전투기 개발 비용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군납 계약 관련 부패에 대한 엄중 단속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군 고위간부와 군납회사 간의 불투명한 유착을 낱낱이 밝혀 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KAI 주가는 화요일 연중 최저치인 47,650원을 기록한 후 목요일 1.59% 상승하여 51,000원 선을 회복했다. 기준 코스피 지수는 0.49% 상승하여 새로운 최고치인 2,441.84를 기록했다.
- 전문가들은 이번 스캔들로 인하여 5,900억원(5억2,400만 달러)에 달하는 수리온 헬기 21대의 인도네시아 수출 계획을 포함하여 KAI의 적극적인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케이프 투자증권의 최진명 애널리스트는 'KAI가 인도네시아에 수리온 헬기를 수출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수리온 헬기 인도네시아 수출 건은 KAI의 연간 수주 목표액의 9%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 KAI는 특히 필리핀과 태국, 미국에 대한 군용기와 부품 수출을 통하여 해외 시장에서 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 달 초 KAI는 미국 보잉사와 6,412억원 규모의 B777X 여객기 날개 리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 KAI의 최대주주는 국영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지난 달 수출입은행 자본 확대 정부 전략에 따라 또 다른 국영 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했던 18.68%의 지분을 넘겨받고 KAI에 대한 지분율을 26.41%까지 끌어올렸다.

※ 원문기사: CEO of top South Korean military supplier resigns over corruption scandal (NIKKEI ASIAN REVIEW, Jul. 20, 2017)

삼성 후계자, 부패 혐의 유죄판결로 징역 5년형 선고 (The Guardian, 2017.8.25)

- 삼성그룹 총수 대행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와 위증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으면서 한국 대통령을 이미 탄핵으로 이끈 뇌물 및 측근 비리 스캔들이 한국 재계 1인자까지 집어삼키게 됐다.
- 한국에서 3번째로 부유한 재력가이자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삼성 그룹의 후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대통령의 최측근이 운영하는 재단에 엄청난 규모의 기부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뇌물을 공여했다고 말했다.
-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의 송우철 변호사는 법원 밖에서 ‘변호사로서 법원의 그러한 법리적 결정에 동의할 수 없고 판결문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또한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고 항소 공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내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 뇌물공여, 횡령, 해외재산은닉, 위법행위를 통한 이익 은닉 및 위증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이 부회장은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공판 이전 한국의 방송사들은 이부회장의 구치소 출발 모습으로부터 법원 도착 모습을 쫓아가며 보도했다. 이 부회장은 수갑을 차고 외투 위로 흰 호송줄을 두른 채 서류 봉투를 든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광범위한 부패 스캔들 이후 한국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위 정치인과 가족 경영 대기업 재벌 사이의 수십 년 동안 뿌리 내린 유착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49세의 이재용 부회장은 검사 측에서 구형한 12년형보다는 짧지만 한국 재벌총수 중에는 가장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다른 네 명의 삼성 임원 역시 유죄 판결을 받고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말 예정되어 있는 공판에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 한국 언론에서 ‘세기의 재판’이라고 이름붙인 이 부회장의 공판을 방청하기 위하여 30개의 방청석에 400명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 법원 밖에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해 수백명의 전경이 배치됐다. 박 전 대통령은 독재자의 딸로 2012년 한국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2013년 2월 취임했다.
-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의 일상적 경영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회장의 그룹 소유권을 강화하는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가로 이 부회장이 직접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의 재단에 대한 기부를 승인했다고 판결했다.
- 2월 구속된 이후 이 부회장은 최순실의 재단에 대한 기부금 납부가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박근혜 정권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얻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 한국 최대 재벌 일가이자 최고 기업인 삼성의 후계자인 이 부회장은 최순실 소유의 네 개 사업체에 3800만 달러 (3000만 파운드)를 지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제공하며 보안 절차 없이 정부 문서를 자유롭게 입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최순실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은 최순실의 재단에 기부금을 냈다는 의혹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삼성은 또한 최순실 딸의 독일 내 승마 훈련을 위해 수십억원을 별도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은 2015년 논란을 일으켰던 80억 달러 규모의 삼성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한 정부 승인을 얻으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합병을 통하여 그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많은 주주가 문제의 합병에 반대했으나 삼성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승인 후 합병이 이루어졌다.
-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삼성의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해 왔던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 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 투자자들은 이 부회장의 부재로 인하여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3,220억 달러 (2,500억 파운드) 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삼성의 지도부에 공백이 생기고 주요 전략 결정 능력에 차질을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 삼성은 금요일 판결에 대하여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임직원들은 ‘할 말을 잃었고’ 회사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 한 삼성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금요일 이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우리는 상당히 놀랐다’며, ‘유죄판결까지 받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지도부 공백 때문에 회사가 비상모드에 돌입했다. 이 부회장의 유죄판결은 비상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했다.
- 한국에서 법정에 섰던 다른 기업인들은 일반적으로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법정에서 재벌 총수들에게만 관대하게 법을 적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 2009년 탈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의 부친 이건희 삼성 회장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판사는 이 회장이 한국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이 회장이 ‘기업 경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애국심’을 증명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최종 판결 4개월 후 이 회장은 결국 사면을 받았다.
-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 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상인 교수는 ‘재벌 총수들은 항상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심지어는 이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만을 선고받는다’는 ‘3-5 법칙’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말했다.

- “만약 이 부회장이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다면 재벌총수가 실제로 수감되는 일은 없었던 과거의 관행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한국의 신임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치러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재벌에 대한 통제 강화와 대기업 화이트칼라 범죄의 적극 단속을 선언했다.

※ 원문기사 Samsung heir sentenced to five years in jail after corruption conviction (The Guardian, Aug. 25, 2017)

한국의 청탁금지법 대체적으로 성공적 (NIKKEI ASIAN REVIEW, 2017.10.5)

- 한 한국 여성에게 이제 시행 1주년이 된 한국의 부정청탁 금지법은 아이의 선생님에게 명품 스카프를 더 이상 선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 이 여성은 밝은 목소리로 5월의 스승의 날에 ‘더 이상 아이 선생님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할지 걱정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자신은 값싼 액세서리를 걸치면서도 선생님에게는 브랜드 액세서리를 선물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썼던 일들을 떠올렸다. 한국 아이들의 장래에 학력이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교사들이 잘 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스승의 날에 최대한의 성의 표시를 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 사립학교 교사와 기자 등을 포함한 직업군에 대한 선물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이 새로 도입된 이후 한국의 뿌리 깊은 접대 문화에 대한 충격요법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그 와중에도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는 매출 하락을 이유로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 한국행정연구원에서 9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 89%와 공무원 95%가 부정청탁 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접대를 받는 쪽과 하는 쪽 모두가 새 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리서치 회사 CEO 스코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한국 500대 기업의 선물 및 접대비 지출이 15% 감소했다. 해당 기간 동안 매출 6%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 네 곳 중 세 곳은 접대비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정청탁 금지법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 소비자의 구매 습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선물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기간인 추석 연휴 동안 롯데백화점에서 법적 한도인 5만원(43달러)을 넘지 않는 가격의 선물 매출이 50% 이상 상승했다.
- 그러나 요식업계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1인당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 도입 이전에는 그 이상 금액의 식사 접대가 일반적이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시행한 420개 음식점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식업계 매출이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22%였다.

- 외식업계에서는 인력 축소와 메뉴 변경으로 매출 감소에 대응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속도로 매출이 계속 감소하면 음식점 상당수가 영원히 폐업하게 될 것이라며 식사 접대비 상한선의 상향 조정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 법을 발의한 전 대법관의 이름을 따라 ‘김영란법’이라고도 알려진 부정청탁 금지법이 도입된 지 10개월이 지난 7월까지 총 4,052 건의 위반이 신고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 중 29 위반건에 대하여 범칙금이 부과됐고 11건에 대해서 기소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
- 연줄이 중시되는 한국 문화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친구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부정청탁 금지법을 통하여 부패와 부정행위를 낳는 것으로 여겨졌던 호화 접대 관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일부 기업에서는 공무원들과 터놓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적어질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 원문기사: South Korea's anti-graft rules appear to be working, mostly (NIKKEI ASIAN REVIEW, Oct. 5, 2017)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한국의 부정청탁 문화 바뀌 (The Straits Times, 2017.10.5)

-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이제 시행 1년이 된 부정청탁 금지법은 해마다 5월에 돌아오는 스승의 날과 관련된 골칫거리를 없애주었다.
- 학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의 학교 선생님에게 어떤 비싼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 니케이 아시안 리뷰의 보도에 따르면 자녀의 학력을 매우 중요시하는 한국에서 학부모들은 자녀가 교사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승의 날에 무리한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 뇌물에 가깝다는 의견도 많았던 그러한 선물 관행이 시행 1년이 된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인하여 바뀌어 가고 있다.
- 서울교육청에서 36,947명의 학부모와 18,101 명의 교사에게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76%와 교사의 82%가 학교에서 특별 대우에 대한 부당 청탁이 법의 도입 이후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 코리아 헤럴드는 지난 달(9월) 열린 한국사회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별도 조사의 응답자 1,202명 중 89.4%가 청탁금지법이 뇌물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법을 발의한 대법관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 9월 28일에 발효되었다.
- 김영란법은 학생 성적을 올려주는 대가로 촌지를 받는 교사, 호의적인 기사를 써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언론인, 행정 절차를 빨리 처리해주고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공무원 등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
- 이들은 가족 외 타인에게 3만원(36달러) 이상의 식사 접대, 5만원(60달러) 이상의 선물, 혹은 10만원(120달러) 이상의 부조금, 화분, 혹은 화환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코리아 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김영란법 위반의 경우 최대 징역 3년형과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부패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한국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뿌리 깊은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 김 교수는 또한 ‘그러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 있어서 김영란법이 이제 제도적인 기틀을 제공해주고 있고, 국민의 사회 활동과 기업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 실질적 기준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김영란법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니케이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한국 국민의 89%와 공무원의 95%가 김영란법을 지지한다고 보도했다. 접대를 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가 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 2017년 상반기 기준 한국 500대 기업의 선물비 및 접대비 지출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고 니케이가 한국의 리서치 회사인 CEO 스코어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 김영란법은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도 바꾸었다. 더 값싼 선물을 구입하는 것이다.
- 니케이는 한국에서 선물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이번 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롯데백화점에서 김영란법의 선물금액 상한선인 5만원 이하의 선물 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 대부분의 한국인이 김영란법을 지지하고 선물구입 습관 등을 바꾸고 있는데 반해 일부에서는 아직도 김영란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 니케이 신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대상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김영란법 시행 10개월차인 올해 7월까지 총 4,052건의 위반이 신고됐다고 보도했다. 이 중 29건에 대하여 범칙금이 부과되고 11건에 대하여 기소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
-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가장 처음으로 지난 해 12월 관련 재판을 받은 55세의 여성은 9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성은 법이 발효된 첫 날인 9월 28일에 경찰관에게 선물 금액 상한선인 3만원이 넘는 4만5천원 상당의 떡을 전달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떡을 전달한 경찰관은 이 여성이 고소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김영란법이 부패 근절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다.
- 우선, 전통적으로 선물로 인한 매출이 높았던 농축수산업과 꽃 산업, 요식업과 주점 업계의 매출에 타격이 있었다.
- 코리아 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산업의 300개 업체 조사 결과 56.7%가 김영란법 시행 1년 간 시행 전 대비 평균 34.6%의 매출이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 원문기사: A year on, anti-corruption law changes South Korea's graft-prone culture (The Straits Times, Oct. 5, 2017)

3 국제회의 동향

① 부패사건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APEC 워크숍

1.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7. 7. 19.(수) ~ 7. 20.(목), 대만 타이페이
- 주관기관 : 대만 염정서 및 파푸아뉴기니 국가반부패기구
 - ※ 위원회는 동 워크숍의 Co-Sponsor로, 한국의 부패신고 보호·보상제도 발표를 요청 받음
- 참석자 : 21개 APEC회원국, 각국 법집행기관 학계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약 70명
 - ※ 우리 측 : 공익심사정책과장, 보호보상과 서정화 주무관

2. 주요 내용 및 활동

- 워크숍 주요 내용
 - 유엔반부패협약을 바탕으로 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신고자 보호 관련 제도현황 소개 및 개선방향 논의, 증인·신고자 보호 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부패신고 유도 방안 모색
 - 실제 신고자 보호 사례에 기초하여 그룹 토론 진행, 각국의 신고자 보호 관련법에 규정된 신고자의 정의, 보호 범위 및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고 효과적인 증인·신고자 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 방법 등 논의
- 위원회 주요 활동
 - 내부고발자 보호·보상 체계 및 기타 부패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 등 소개
 -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연혁, 청탁금지법 제정·시행
 - 대만, 필리핀, 뉴질랜드 등 참가국 다수가 신고자 보호에 대한 독립적인 법체계 확보, 비밀보장·신변보호 등 다양한 신고자 보호 수단 및 보상·포상 제도를 통한 신고 유인책을 갖춘 한국 법체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임
 - UNODC 및 아세안 사회공헌활동 네트워크 관계자 등과 언론이나 SNS를 신고창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와 효과적인 신고자 보호 전략 등에 대해 토론

② 제25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회의 및 워크숍

1.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7. 8. 18.(금) ~ 8. 22.(화), 베트남 호치민
- 참석자 : 21개 APEC 회원, TI, UNODC 등 국제기구 대표 60여명
 - ※ 우리측: 법무보좌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법무부 검사 참석

2. 주요 내용 및 활동

□ ACTWG 회의 및 워크숍 핵심요지

- 제25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
 - 각국 반부패협약 이행 및 반부패활동 보고에서는, 15개 회원 기관 발표
 - ※ 위원회 출장단은 한국 대표로 새 정부의 반부패 의지 및 한국의 유엔 반부패협약(UNCAC) 이행 경과보고
 - ACTWG 2017-2020 중장기 전략계획은 회원기관의 수정·삭제 요청 사항을 반영한 버전을 회람 후 최종 채택기로 결정
 - 2017 APEC ACT 분야 각료회의 선언문은 이견 없이 채택
- 부패 및 불법거래 척결에 대한 Pathfinder Dialogue IV
 - 불법 벌목 및 동식물 밀매와 같은 부패는 초국적 공급망으로 이루어져 각국 사법 당국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 각국의 강력한 반부패 국제 협약제정 및 이행노력이 촉구됨

□ 위원회 주요 활동

- 국제사회에 새 정부의 반부패 의지 소개
 - APEC 회의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민주적으로 극복한 한국의 부패 자정능력 및 새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 소개
- 한국의 우수 반부패 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인
 - 공익신고제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에 대해 APEC 회원국, 반부패 국제단체(TI) 등이 높은 관심을 보임

③ '17년 제3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1.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7. 9. 13.(수) ~ 9. 14.(목), 오스트리아 비엔나
 - 주관기관 : G20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국(독일, 브라질)
 - 참석자 : G20 회원국 및 초청국(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대표, OECD, UNODC, World Bank 등 반부패 국제기구 대표
- ※ 우리 측 :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외부부 사무관 참석

2. 참석 결과

□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결과

- 실무그룹의 금년도 논의사항 및 성과에 대한 최종안 완성
 - 2017년 반부패실무그룹 이행보고서
 - G20 반부패기술지원 제공현황 보고서
 - ▶ 목적 : G20회원국 반부패기술지원 제공현황과 UNCAC회원국 반부패 기술지원 수요현황의 연계, 관련 문제점 및 우선순위 확인
- 2017-18 G20 반부패 행동·이행계획 포함 안전 논의 진행
 - 국제스포츠분야 부패방지
 - ▶ OECD·UNODC·영국 주도의 국제스포츠반부패파트너십(IPACS) 발족 소개
 - 지속가능개발계획(SDG) 16번 목표(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의 실질적 감소) 달성을 위해, 부패인식조사(CPI)를 대체할 과학적 지수의 필요성
 - ▶ UNODC는 부패측정 및 반부패 모니터링 관련 활동을 소개하며, 부패 인식조사의 단점 (△결과의 부정확성, △조사 답변이 답변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러한 답변을 제공했는지 알 수 없음,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활발할 수록 부패인식조사 결과는 안 좋은, 노력과 인식의 반비례 경향)에 대해 언급하며, 부패인식조사를 잣대로 정책을 입안 하거나 정책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의 문제성을 지적함
 - ▶ UNODC는 SDG를 반영하고 합의되고 과학적이며, 부패의 만연정도가

아니라 정부의 UNCAC 이행 노력과 그 효과를 평가하는 지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 중임을 밝힘.

- ICT를 활용한 부패방지 방안(UNODC의 회원국 ICT활용현황 소개)
- 사법분야 투명성, B20/C20의 제안(인프라사업 청렴·투명성, 반부패 실무그룹 결과물 이행 증진), 법인실소유자 정보 등록부 및 국가간 공유, 부패·조직범죄 연계성, 외국뇌물 등

□ 위원회 주요 활동

- 새 정부 반부패 정책 소개
 - 새 정부 탄생 배경과 반부패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반부패 의지 소개
- G20 2017-18 반부패행동계획 관련 소관과제 추진
 - G20 국가별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정책 조사를 위한 질문지* 초안을 마련(OECD, UNODC 협조), 회원국 의견 수렴

국외출장 자료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서 원문 조회 가능

4 옴부즈만 소식

□ 세르비아: 신임 옴부즈만 임명

※ 출처: SERBIA ‘New Ombudsman appointed’ (IOI 홈페이지>News, 25.07.2017)

- 벨그라드 출신 변호사 조란 파살릭이 세르비아 공화국의 신임 ‘국민 보호자’(옴부즈만)으로 임명됐다. 파살릭은 1958년 벨그라드에서 태어나 1992년 벨그라드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 1991년부터 1997년까지 파살릭은 벨그라드에 위치한 법무법인에 근무했으며 1998년부터 세르비아 국내 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 2003년에는 벨그라드시 경범죄 재판소의 판사로 임명됐다. 그 이후 2008년 재판소장 대행으로 임명된 후 같은 해 12월에 벨그라드시 경범죄 재판소장으로 임명됐다. 2010년 초 경범죄 고등재판소장 대행이 된 이후 2013년에는 재판소장으로 임명됐다. 그 이듬해에는 경범죄 항소법원장으로 선출됐다.
- 2004년부터 경범죄 재판소 판사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05년부터 협회의 최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08년에는 경범죄 재판소 판사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0년부터는 사법연구원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 유엔여성개발기금의 “세르비아 여성의 사회·경제적 권리 신장 - 사법 아카데미 커리큘럼 개발’ 프로젝트 실무 그룹에서 활동했으며 또한 ‘양형거래에 대한 판사 실습과목’개발 실무그룹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 파살릭은 2017년 7월 20일 개최하는 세르비아 정기국회에서 의원 142명의 찬성 투표를 통하여 세르비아 공화국의 ‘시민 보호자’로 선출됐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나이지리아인 처형 관련 권리 침해 증거 발견

※ 출처: INDONESIA 'Indonesia ombudsman finds rights violations in execution of Nigerian' (IOI 홈페이지>News, 28.07.2017)

-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실에 따르면 지난해 나이지리아인 마약사범의 처형 과정에서 권리의 침해가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
-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옴부즈만실의 니닉 라하유 조사관은 나이지리아인 마약사범 험프리 제퍼슨이 처형 당시까지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선처를 요청 중이었으며, 이에 따라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말했다.
- 2004년 사형 선고를 받은 제퍼슨은 대법원의 2차 심의를 요청했으나 이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 없이 자카르타 중앙법원에서 요청이 거부되었고 이는 행정 실책에 해당한다고 라하유 조사관이 밝혔다.
- 법원에서 재심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제퍼슨의 처형은 최종 판결까지 미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라하유 조사관은 '누군가에게 사형이 집행될 때에는 모든 관련 절차가 법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 "한 개인의 권리가 사형이 집행되기 이전에 전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올 수는 없지 않은가."
- 라하유 조사관은 또한 사형 집행의 최종 책임이 있는 법무장관실이 제퍼슨과 그 가족에게 사형 집행 72시간 전 통보해야 한다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 법무장관실의 무함마드 럼 대변인은 제퍼슨의 사형이 법에 의거하여 집행됐다고 말했다.
- 자카르타 중앙법원은 관련 문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다.

- 대법원 대변인 수하디 판사는 특정 사건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재심리는 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마약 관련 범죄로 체포된 14명 중 제퍼슨과 두 명의 다른 나이지리아인 그리고 한 명의 인도네시아인만이 지난해 7월 29일에 총살형에 처해졌다.
- H. 무함마드 프라세트요 법무장관은 ‘종합적인 검토’ 때문에 형 집행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 제퍼슨과 다른 마약사범의 처형은 위도도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집행된 사형이었다. 위도도의 전임 수실로 밤방 유드호요노 대통령은 사형 집행 중단을 선언했었다.
- 수많은 국제단체와 외국 정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형 집행 중지를 촉구해 왔으며 또한 인도네시아의 사형제 폐지를 촉구해 왔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위도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체포를 거부하는 마약 밀매범에게 발포해도 좋다고 경찰에게 말해왔다.
- 음부즈만실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정부 당국에 60일의 답변 기한을 주었다. 그러나 당국에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위도도 대통령에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 제퍼슨의 변호인 리키 구나완은 음부즈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장관실에 제퍼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 구나완 변호사는 ‘법무장관실에 향후 사형 집행 준비를 중단할 것과 수감자들의 인간다운 대우와 권리 존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중국: 홍콩 옴부즈만, 공공임대주택 내 유휴 공간 창고 이용 관련 조사

※ 출처: CHINA ‘Ombudsman Hong Kong probes Housing Department’s arrangement for using idle spaces as storerooms in public housing estates’ (IOI 홈페이지>News, 07.08.2017)

- 홍콩의 코니 라우 옴부즈만이 오늘 (7월 26일) 공공임대주택 내 유휴 공간을 창고로 제공하는 홍콩 주택관리국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직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 초기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는 부지 주변에 유휴 공간이 포함되도록 설계되었다. 건축조례 하에서 이러한 공공 주택 내 유휴 공간이 실제 이용되는 데 모든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홍콩 주택관리국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주거공간으로 임대할 수 없다. 수년 간 주택관리국에서는 이러한 유휴 공간에 담장을 두르고 창고로 변경시켜 공공주택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가구나 다른 집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제조합의 자료 보관용 공간으로 임대해 왔다.
- 이와 관련된 민원을 조사하던 중 홍콩 옴부즈만실은 공공임대주택 내 창고공간의 공실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옴부즈만실은 현장 조사에서 한 공공주택의 저층부 전체가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거나 다른 주택의 경우 공실로 남아있는 창고 공간의 내부 구조가 일반 임대주택 내부 구조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옴부즈만실은 공공주택 내 유휴공간을 창고 용도로만 사용하는 주택 관리국의 오랜 관행에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높은 공실률이 보여주듯 창고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기 때문에 주택관리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비어있는 창고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의문으로 남아있다.
- 라우 홍콩 옴부즈만은 ‘공공주택 내 공간은 소중한 국가 자산으로 주택 관리국은 이러한 자산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록 공공주택 내 유휴공간의 임대용 용도 변경이 환경 규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제 내에서 더 나은 활용을 도모할 방법이 없었는지 여전히 의문스럽다. 주택관리국에서는 소중한 공공자산을 그냥 방치해두는

대신에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옴부즈만실에서 이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하여 주택관리국이 공공주택 내 유휴공간과 비어있는 창고 공간을 활용하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했는지 검토할 것이고 개선방안을 함께 찾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옴부즈만실은 현재 특히 건축, 건물 측량, 설계 및 기타 관련 전문 분야의 일반 시민으로부터 의견서를 접수받고 있다.

□ 영국: 노인 환자 가족들 요양 및 치료 관련 문제 민원 제기 어려워

※ 출처: UK ‘Older patients’ families struggle to complain about poor hospital care’ (IOI 홈페이지>News, 21.08.2017)

- 오늘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환자들의 병원 치료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및 친지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 (51%)가 병원 요양 및 치료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 영국의 노인 정보공유 사이트 그란스넷과 의회/보건서비스 옴부즈만에서 발간한 이번 조사에서는 그란스넷 사용자들이 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 가족을 대신하여 국민의료보험에 민원을 제공했던 경험에 대하여 조사했다.
- 의회/보건서비스 옴부즈만에서는 노인 인구의 국민의료보험 이용 건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기하는 민원 건수가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 옴부즈만 서비스에서 발표한 이전 보고서에서는 많은 노인 요양 환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요양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까봐 제대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600명 이상의 그란스넷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 ▶ 노인 환자 가족이 받고 있는 치료에 대하여 우려되는 점이 있는 사람들 중 절반 약간 이상 (58%)만이 민원을 제기했다.
 - ▶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 중 3분의 2 (67%)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 3분의 1 (35%) 이상의 응답자가 병원에서 요양 혹은 치료 중인 가족 노인환자의 요양 및 치료에 대하여 걱정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 ▶ 3분의 1 (31%) 이상이 자신의 가족이 치료받는 병원 직원들이

치료받는 노인 환자의 상태나 이와 관련된 요양 관련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다고 응답했다.

- 이번 조사 결과는 또한 노인 환자나 그 가족과의 의사소통 상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 설문 참여자 중 5분의 2 (40%)는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환자의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환자의 요양 및 치료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 ▶ 응답자 3분의 1 (33%)은 노인 환자의 요양 및 치료에 대한 결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영국 국민의료보험에 대한 옴부즈만 서비스의 조사 결과 민원의 3분의 1 가량이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것이었다.

- 의회/보건서비스 옴부즈만 롭 베렌스는 ‘많은 노인 환자들에게 국민 의료보험이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너무나 많은 노인 환자들이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국민의료보험이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다른 이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국민의료보험 임직원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며 추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 오스트리아: 크라우터 옴부즈만 한국 대표단 비엔나 방문 환영

※ 출처: AUSTRIA ‘Ombudsman Krauter welcomes South Korean delegation in Vienna’
(IOI 홈페이지>News, 07.09.2017)

-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학술 방문 중인 한국 대표단이 2017년 9월 5일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위원회(AOB)를 방문했다. 한국 대표단에는 단장 신철영 강원도 옴부즈만 위원장을 포함하여 한국 여러 도시의 감사 및 일반 공무원들이 포함됐다. 이번 학술 방문을 통하여 AOB와 한국 대표단 사이의 경험 공유 및 유익한 교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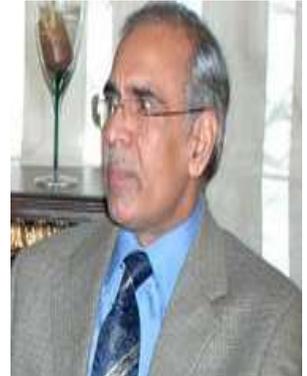


- 크라우터 옴부즈만은 AOB의 조직구성과 법적 근거, 책임범위, 권한, 조사 절차에 대해 발표하기 이전에 먼저 현재의 북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 이후 AOB의 국제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중 세계옴부즈만협회(IOI)를 언급하면서 IOI가 오스트리아 AOB 구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이는 특히 최근 IOI 회원이 된 강원도 옴부즈만 위원회의 큰 관심을 모았다. 한국 대표단은 특히 AOB의 조직구성과 권한 및 IOI의 재원 조달과 옴부즈만 기구의 인권 문제 처리 방식 등을 포함한 AOB와 IOI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 회의 막바지에 크라우터 옴부즈만은 내빈들에게 매주 방영되는 ‘부르겐발트’(국민의 지지자)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중과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소통하는 AOB만의 특별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소개했으며 한국 대표단은 그러한 미디어 프로젝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2016년 방콕에서 열린 IOI 세계회의를 위하여 특별히 영어로 제작된 ‘부르겐발트’ 쇼의 짧은 동영상에 담긴 USB가 한국 대표단에게 방문 선물로 제공되었다.

□ 파키스탄: 신임 연방 세금 문제 옴부즈만 취임

※ 출처: PAKISTAN 'New Federal Tax Ombudsman takes office' (IOI 홈페이지>News, 18.09.2017)

- 압두르 라우프 초드리 의원의 4년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2017년 9월 8일 무스타크 아마드 수케라 신임 연방 세금 옴부즈만이 취임했다. 현재 연방 세금 옴부즈만실 소속의 수케라는 이슬람 회의기구의 옴부즈만 협회 운영위원장과 파키스탄 옴부즈만 포럼(파키스탄 내 12개 연방 및 주 옴부즈만 기구 연합)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 수케라 신임 세금 옴부즈만은 라호르에 위치한 파키스탄 최고 대학인 편잡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공직 재임 중 수많은 해외 유명 전문가 과정 및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파키스탄 경찰청 소속으로 최고위직까지 오른 수케라 신임 옴부즈만은 36년의 공직생활 동안 수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연방 세금 옴부즈만실 합류 이전에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지역인 편잡과 발루치스탄 주 경무관으로서 큰 신임을 얻었다.